尹, 이주호 교육장관 임명 수순… 현안 처리방법 '주목'

이 후보자 청문경과보고서 불발에 윤 정부, 이주호 임명강행 예상

교부금 개편·자사고 존치여부 등 산적한 현안 처리 속도 붙을 듯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뉴시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 임명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전교조

금주 안으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가능성이 높아졌다. 두 차례 낙마 끝에 선임되는 교육 수장이 산적한 교육현안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지 주목된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자사고 존치 여부, 유보통합 등 교육현안이 쌓여 가고 있지만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해 합의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이 후보자의 임명 강행이 예상되면서 현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이 후보자는 앞서 AI업체에게 고액 기부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는 등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해충돌이 발생했다. 이에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임명 강행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국회에 요청해 기간을 4일로 지정했다. 즉, 5일부터는 윤 대통령의 이 후보자 임명이 가능하며, 교육계의 거센 반대에도 임명이 강행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이 후보자에 대해 '교육자'가 아닌 '경제학자'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교육현안들을 어떻게 풀어갈 지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고등교육 재정 지원이 시사되면서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시도해 교부금 일부를 고등교육 재정으로 넘기고자 했다. 이에 교육계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라며 전국 시·도교육감과 교육 단체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교부금 수호'에 나선 상황이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장기간의 등록금 동결 등으로 열악한 대학 재정상황과 한정된 국가 재정 여력 등을 고려할 때, 최근 급격히 증가한 교부금을 교육부문 간 투자 불균형 해소 및 전체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교부금 개편 찬성 기조를 보인 바 있어 충돌이 예고됐다.

교부금뿐만 아니라 서울시교육청 등과의 소송이 진행됐던 자사고 존치 여부에 대한 논의도 요구된다. 자사고 등은 이 후보자가 MB 정부 당시 추진했던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로 이 후보자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부작용을 일부 인정했다. 이 후보자는 "소위 말하는 고교 다양화 정책이 서열화로 이어진 부작용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부분에서 보완해나가면서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30년간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는 유보통합의 가속화도 관측된다. 지난 8월 교육희망네트워크 등 7개 단체가 모인 '교육부 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학부모 연대'는 유보통합의 신속한 추진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 역시 서면질의 답변서 등에서 국정과제인 유보통합의 추진을 언급하며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을 추진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교육과 보육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취학연령 하향 추진에 대한 질의에는 부정하며 선을 그었다.

교육계는 이 후보자의 임명이 다가오자 반응이 엇갈리는 상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시민단체 등은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후보자의 임명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이 후보자는 교육에 시장 논리를 들이대 교육 특권층을 양산하고 소수만 살아남는 극단적 경쟁을 부추겼다"며 "공교육 황폐화의 주범 이주호의 교육부 장관 임명을 절대 반대한다"고 촉구했다. 사실상 임명을 코앞에 두고 있지만 반대의 목소리는 여전히 거세다.

반면 다음 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 후보자가 장관 공백 상태로 산적해 있는 여러 교육현안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사회부총리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리라 기대한다"며 "산적한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더 이상 교육부 장관의 공백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462억 투입… 개포도서관 재건축 속도

서울시교육청, 강남구와 협력 2027년 개관… 연간 100명 수용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관내 개포도서관 재건축 추진사업이 중앙투자심사에서 최종 승인됐다고 6일 밝혔다.

개포도서관은 그동안 노후 및 안전문제, 개포택지지구 재개발에 따른 수요 증가를 대비해 규모를 확장한 재건축을 추진해 왔으나 재원 확보 등의 문제로 중앙투자심사에서 두 번 반려돼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교육청과 강남구가 협력해 도서관과 지하공영주차장 복합화시설로 계획하고, 건립비 지원 등 협약을 체결해 지난 10월,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으로 추진에 속도를 내게 됐다.

개포도서관은 2027년 1월 개관을 목표로 지하공영주차장을 포함해 지하 4층부터 지상 3층까지 연면적 13,781㎡ 규모로 재건축할 계획이며, 총 건립비는 약 462억이다.

새로 건축하는 개포도서관은 강남구에서 가장 큰 도서관으로 지역 중앙관 역할이 가능한 규모이며, 개포근린공원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파크 라이브러리' 개념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

개포도서관을 완공하면 연간 약 100만명 이상이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반경 1.5km 내 28개에 달하는 초·중·고 학생 약 2만2000명에게는 학교 밖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2개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서관은 100여년의 오랜 기간 동안 서울 학생·학부모·시민의 독서와 문화 중심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왔다"며 "교육청 도서관 중 최초 재건축하는 개포도서관이 새로운 미래 100년을 선도할 공공도서관 모델이 되고, 미래세대를 위한 다양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단지 개포택지지구 개발로 주민 수가 급속히 증가하는 반면에 문화기반 시설이 취약한 점을 우려해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개포도서관 재건축 추진에 적극 지원해 주신 서울특별시의회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신하은 기자 godhe@

韓 고등교육 정부투자 OECD 32위 그쳐

대교협, OECD 평균의 37.3% 불과

한국 고등교육 정부부담 공공재원 투자율이 OECD 회원국 중 32위에 그쳤다.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이 꾸준히 요구되는 가운데, 고등교육 학생 1인당 공교육비에서 한국과 OECD 평균의 격차가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국제지표를 통해 본 고등교육재정 투자현황'을 분석해 6일 발표했다.

대교협에 따르면 한국 교육단계별 정부부담 공공재원 투자는 초·중등교육에 편중됐다고 분석됐다. 특히 고등교육 재정 투자는 OECD 평균의 37.3%에 불과하며, OECD 회원국 중 32위 수준으로 드러났다.

다만 초·중등교육 재정 투자는 OECD 평균의 143%로 분석되면서 OECD 회원국 중 4위를 차지했다.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비교하면 1.4배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대교협은 한국 대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 정부부담 공공재원 투입액은 $4,323로 38개국 중 32위의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정부부담 공공재원 투자는 초·중등교육에 편중됐다는 분석이다.

/신하은 기자

한국외대-폴란드 대사관

어린이 전쟁 사진전 개최

한국외국어대학교 폴란드어과가 주한 폴란드 대사관과 공동으로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이 그린 그림을 통해 전쟁의 참혹함을 되새기는 사진전을 7일부터 11일까지 개최한다.

한국외대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본 전시회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로부터 강제 점령을 당한 폴란드의 어린이들이 그린 그림과 현재 전쟁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이 그린 그림을 함께 전시할 예정이다. 본 사진전은 7일부터 11일까지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도서관 1층 멀티미디어실에서 개최되며 참가를 원하는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신하은 기자

4일 진행된 'SCH-ESG 위원회' 3차 회의에 참가한 내·외부 위원, 교직원, 학생들이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순천향대

순천향대, ESG 경영체계 수립 추진

'SCH-ESG 위원회' 출범

순천향대학교는 최근 ESG 경영 추진체계를 정립하고 지속가능한 대학운영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SCH-ESG 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SCH-ESG 위원회는 순천향대 고유의 ESG 경영체계를 수립하고, 대학 구성원의 ESG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실행 가능한 추진과제 제시 및 방향성 설정을 위해 구성됐다.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는 기업·기관이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 비재무적 요소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고, 사회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지 판단하는 지속가능성 평가 지표다.

ESG위원은 김재필 교학부총장, 윤성환 기획처장 등 대학의 주요 보직자와 김인우 신창면장(지역 주민 대표), 성재경 읍내청년회장, 조삼혁 사회복지법인 중부재단 충남본부장(사회봉사서비스 전문가), 오승규 이노비즈협회 차장(기업 네트워킹 전문가), 유수용 세무법인 혜움 세무사(세무 전문가, 순천향대 경영학과 졸업) 등 각 분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됐다.

지난 8월에는 1차 회의를 통해 위원회 운영 기본 방안 및 전략을 수립했으며, 9월 2차 회의에서 국내·외 대학 ESG 추진 설정 과제 및 실행 사례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4일 진행된 3차 회의에서는 60여 명의 내부 구성원이 참여해 ▲외부위원 위촉식 ▲BDO성현회계법인정종철공인회계사(ESG센터장)의 '대학 ESG 경영의 필요성 및 핵심 평가 지표 사례'를 주제로 한 전문가 특강 ▲SCH-ESG 분과별 자유 토론 등이 이어졌다.

전문가 특강에서 정 회계사는 ▲탄소중립을 위한 ESG 연구 ▲지자체 ESG 경영체계 구축 ▲ESG 전문가 인증 과정 등 산학협력의 활성화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필 교학부총장은 "우리대학은 교육이념인 인간사랑의 정신에 입각하여 순천향 고유의 ESG 경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대학 내 구성원들과 더불어, 다양한 외부 전문가와 연계한 ESG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